

1. 개요

- 목적 :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대상으로 ‘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’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- 주제 :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
- 일시/장소 : '21. 10. 1(금), 14:00~17:00 / 충남 청양군 남양면 행복나눔터
- 주최 : 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- 주관 : 주)오르빌, 사)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
- 참석자 : 농특위(위원장, 사무국장, 분과위원, 담당팀 등) 8명, 충남도(과장, 도의원 등) 5명, 청양군(군수, 추진단, 센터장, 활동가 등) 10여 명, 인근 지역 사업 담당자 및 활동가 10여 명, 토론자, 주관단체 관계자 등 총 40여 명 참석*

* 이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최대 동시 시청자 수 40여 명 참여

2. 행사결과

-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과 필요성 강조
 - 총괄·조정 체계 형성 및 민간 채용을 통한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마련
 - * 청양군의 경우 총괄조정 ‘농촌공동체과’ 부서 신설, 임기제 공무원 배치
 - 민관협치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
 - * ‘충청남도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’ 제정
 - 민간 조직화 활동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
 - *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‘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’, ‘충청남도 농촌활력지원센터’ 등
 -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지향하는 정책 전달체계 강화 필요

3.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

1 발제 주요내용

- ①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
 - ▶ 구자인 소장(농특위 농어촌분과 위원, 마을연구소 일소공도)
- ②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경험과 시사점
 - ▶ 황준환 추진단장(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)

□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(구자인 소장)

-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계획수립 과정, 추진체계 구성과 협력 경험 축적, 민간주체 발굴과 육성 등 민관협치가 반영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,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시행착오 반복 중
-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지향하는 정책 전달체계 강화 필요
 - 중앙(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) - 광역(지자체와 권역 중계단) - 기초(지자체, 위원회, 추진단) 등 정책 전달체계가 민관협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 및 권한의 제도적 조정이 필요
 - 중계단을 확대해 늘어나는 사업에 실질적 자문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, 광역단위도 행정협의 및 중간조직 기능을 통합하여 기초지자체의 민관협치 사업을 지원하도록 유도
- 지자체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활동비 등 지원을 통해 주체적인 민관협치 체계 정착 필요
-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은 사업별 역할이 아닌,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법인으로 안정화 필요

□ **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경험과 시사점(황준환 추진단장)**

- 청양군은 충남 최초로 마을공동체 정책 총괄조정부서로 ‘농촌공동체과’를 신설하고 융복합을 강화해 농촌정책 효율성 강조
- 순환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으로 임명
- 나아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부자농촌지원센터 외 푸드플랜, 도시재생, 주민자치,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‘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’을 2020년 출범
- 공간, 사람, 사업 연계를 위해 ‘함께 이음’ 정책을 수립하고, 사업비의 60%가 넘는 예산을 S/W 사업에 투자하여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협약에 선정

2 토론 주요내용

[좌장] 황의동 대표 (오르빌)
[패널] 노승복 센터장 (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)
김명숙 의원 (충남도의회)
김향자 위원장 (농특위 농어촌분과)
이상길 논설위원 (농어민신문사)
김정연 위원 (농특위 농어촌분과)

□ **노승복 센터장 (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)**

- 청양군은 민선7기 ‘공동체 회복’을 농촌의 구조적 문제 대응 방안으로 삼고, ‘다함께 만드는 청양, 더불어 행복한 미래’를 군정 비전으로 설정하여 총괄조정부서로 ‘농촌공동체과’를 신설·개편해 민관협치의 제도 틀을 마련
- 임기제 공무원 배치를 통해 주민조직과 ‘함께 이음’ 사업 정책화를

실시하고, 중간지원조직 통합을 통한 재단법인 구성 등 일련의 제도적 지원이 민관협치 추진체계 정착에 기여

□ 김명숙 의원 (충남도의회)

- 충청남도는 주민주도와 민관협치를 위해 2021년 2월 전국 최초로 ‘충청남도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’를 제정해 민관협치 추진체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
 - 주요 내용은 실국간 협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설치,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형 ‘충청남도 농촌활력지원센터’ 추진

□ 김향자 위원장 (농특위 농어촌분과)

- 민관협치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하며, 신활력플러스 사업처럼 다른 농어촌사업에서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 필요
- 농어촌사업 관련 사무장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~4년에 불과하며, 현장 활동가들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상향과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

□ 이상길 논설위원 (농어민신문사)

- 과소화, 고령화한 농촌 현실에서 중앙 중심의 농어촌정책 추진은 중간지원조직마저 반관으로 작동할 수 있어 읍·면 단위 마을 자치 중심의 전환 필요
- 도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농촌사업 이후 지역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관리 예산과 규제 개선 필요

□ 김정연 위원 (농특위 농어촌분과)

- 청양군은 생활지역단위의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공급 주체의

참여 및 조직 과정 중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잘 활용하여 농촌
협약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

- 기존 관행으로 진행되는 농촌사업들을 단순히 묶어 놓는다고 통합
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, 유연화하고 재배치하여 민관협치 체계
로 통합해야 협약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

□ (좌장) 황의동 대표 (오르빌)

- 지역과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이며, 지역의 참여와
역할이 커지는 만큼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
- 향후 다른 지역과 사업을 중심으로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논의
하는 토론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

<행사 주요사진>



토론회 기념사진



토론